

KERI Brief

2024 대만 선거결과와 향후 양안 리스크 평가 및 전망

이태규

한국경제인협회 수석연구위원
(tklee@fki.or.kr)

박주형

한국경제인협회 책임연구위원
(jhpark@fki.or.kr)

김영준

한국경제인협회 연구원
(yjkim@fki.or.kr)

민진당 정권재창출로 양안 간 긴장관계는 지속될 것이 분명한 가운데 중국의 대만에 대한 압박 및 도발의 수위도 차이잉원 집권 기간에 비해 낮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지금까지 전개해왔던 '회색지대전술(Gray Zone Tactics)'을 지속·확대하는 것이다. '회색지대전술'이란 전면적인 무력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 정도의 저강도 도발을 반복함으로써 군사안보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전략이다. 양안 관계는 오는 11월 미 대선 결과에 따라 급격한 변화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재집권에 도전하고 있는 트럼프는 현 바이든 대통령과 달리 대만 위기 시 미국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민진당의 정권재창출에도 불구하고 높은 확률로 현재의 양안 긴장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미국 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만약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 뒤 강한 '고립주의' 외교정책을 추진할 경우 양안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상당히 증가할 전망이다. 미 대선 이후 '경제적'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이 외교안보정책

에도 그대로 투영될 경우 양안 분쟁의 위험에 대한 노출도가 큰 한국, 일본 등 동맹국에 대해 양안 안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동시다발적 국제분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미국은 복수(複數)의 전쟁 수행 의사가 없다는 점을 중국이 확신할 경우, 대만에 대한 군사 행동 확률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또한 미국이 고립주의를 선택한다면 국력 하강기(Peak China)에 접어들어 조바심이 생긴 중국의 모험적 군사 행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 정부와 기업은 현 양안의 긴장 상황이 유지될 것이라는 희망에 기대기보다는, 양안에서의 무력 충돌까지 고려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전략물자 수급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과 비즈니스 연속성 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을 수립·보완하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I. 논의의 배경

□ **지난 1월13일 실시된 대만 총통선거에서 민주진보당(이하 민진당) 라이칭더(賴清德) 후보가 득표율 40.05%로 제16대 총통으로 당선**

○ 제1야당 국민당의 허우유이(侯友宜) 후보는 33.49%, 민중당 커윈저(柯文哲)후보는 26.26%의 득표율을 기록

- 라이칭더 당선자의 부총통 러닝메이트는 샤오메이친(蕭美琴)으로 어머니가 미국인이며 10대부터 미국에서 교육받고 2020년부터 주미 대만 대표부(사실상 주미 대사관의 역할) 대표를 맡아온 미국통 외교관

□ **한편 총통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제11대 입법위원 선거에서는 여당 민진당은 국민당에 1석 뒤진 51석을 기록하여 제1당의 자리에서 밀려난 여소야대가 형성됨**

○ 이전 선거에서 전체 113석 중 61석을 차지하여 과반을 달성하였던 민진당은 10석이나 잃은 반면 국민당은 이전 보다 13석이나 더 차지하면서 선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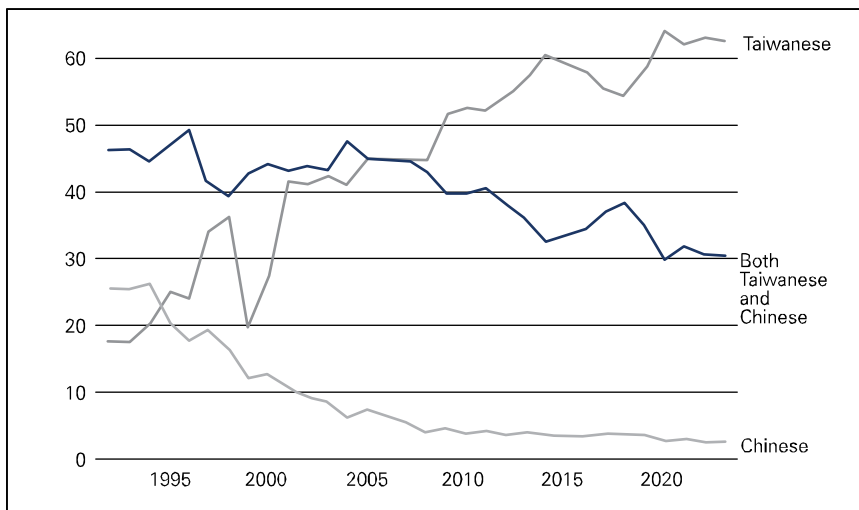
- 제11대 입법위원 선거결과: 국민당 52석(46.0%), 민진당 51석(45.1%), 민중당 8석(7.1%), 무소속 2석(1.8%)

□ **2000년 첫 정권교체로 민진당이 집권한 이래 반복되어 온 8년 주기의 정권교체 패턴이 이번에 깨어졌으며 4년 후 민진당의 정권연장으로도 연결될 가능성도 커짐**

○ 대만 국민,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중국인보다는) 대만인으로서의 정체성(identity)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될수록 친미국 성향의 투표가 많아질 가능성이 큼

- 또한 과거 계엄 기간 시기의 총통을 제외하고 모두 총통 연임에 성공하였으므로 중국의 입장에서는 4년 뒤 총통 선거에 대한 우려도 커짐

〈그림 1〉 대만인의 정체성 조사



자료: The Election Study Centre, NCUU

〈표 1〉 2000년 이후의 대만 총통

순서	총통	당적	기간	비고
제10대	천수이벤	민진당	2000. 5. 20 ~ 2004 5. 20	최초의 정권교체
제11대	천수이벤	민진당	2004. 5. 20 ~ 2008 5. 20	
제12대	마잉주	국민당	2008. 5. 20 ~ 2012 5. 20	
제13대	마잉주	국민당	2012. 5. 20 ~ 2016 5. 20	
제14대	차이잉원	민진당	2016. 5. 20 ~ 2020 5. 20	최초의 여성총통
제15대	차이잉원	민진당	2020. 5. 20 ~ 2024 5. 20	
제16대	라이칭더	민진당	2024. 5. 20 ~	

□ 이번 민진당의 정권재창출은 시진핑이 대만통일을 위해 무력 사용 의지를 명시적으로 천명한 후라는 점에서 이전의 민진당 집권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음

○ 시진핑의 3연임을 정당화하는 (암묵적) 핵심 이유 중의 하나가 대만 통일임

- 2022년 중국공산당 제20차 당대회에서 대만 문제 해결에 있어 무력사용 포기를 선언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 무력통일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음

□ 따라서 단시간에 양안 관계의 큰 변화는 없겠지만 양안 충돌의 잠재적 리스크는 과거 민진당 집권 시 보다는 훨씬 더 커진 상황

○ 특히 작년 미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시진핑은 대만 통일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한 반면 라이칭더 당선자는 대만 독립에 대해서는 차이잉원 총통보다 더 강경한 입장으로 알려짐

○ 이번 선거에서도 중국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대만 선거 개입을 시도하였으며 향후에도 중국은 민진당의 장기집권을 막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대만도 이에 대응할 것이 당연하므로 양안 리스크는 지속적으로 축적될 것으로 보임

□ 향후 민진당의 대만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더욱 줄이고 미국은 물론 다른 자유주의 진영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전망

○ 다른 국가들과의 경제·외교적 협력수준을 더욱 격상시켜 대만을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사실상(de facto) 정식 국가로 인정받는 방향으로 외교정책을 추진할 전망

□ 중국은 이에 대응하여 다양한 방식의 對대만 경제제재 및 군사 도발을 통해 양안 간 긴장도를 높여 대만의 독립 의지를 꺾고자 할 것이 자명

□ 이에 본 보고서를 통해 이번 선거결과에 따른 양안 간 긴장 상황 분석 및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전망과 함께 우리나라에 주는 정치·경제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라이칭더 당선자의 공약 검토와 함께 중국에 의한 對대만 압박, 그리고 향후 미 대선을 고려한 대만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평가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파악

II. 라이칭더 당선자의 정책방향

□ [양안·국방] 라이칭더는 대만해협의 평화를 위한 '평화 4대 기동 행동 방침'을 통해 차이잉원 정부 기조를 계승한 현상 유지에 중점을 둔 양안 및 국방 정책 발표

○ '23.7월 라이칭더는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 기고문을 통해 대만 해협의 평화를 보전하기 위한 계획을 서술하며 4가지 구체적 행동 방침을 제시

- 평화 4대 기동 행동 방침은 ① 국방력 강화, ② 공급망 안전 보장, ③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동맹 관계 구축, ④ 실용적이고 일관된 양안 정책으로 구성

○ 양안 관계에 있어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대만과 국제사회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히며, 차이잉원 정부 집권 이후의 양안 간의 긴장 관계가 지속될 가능성 시사

- 라이칭더는 과거 스스로를 '대만 독립 일꾼'이라 칭하며 독립 성향을 드러냈으나, 경선 과정에서는 "대만은 이미 주권독립국가이기 때문에 독립 선언을 다시 할 필요가 없다"며 독립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함¹⁾

- 하지만 국민당의 허우유이 후보와는 달리 중국이 양안 소통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여기는 '92공식*'이 대만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양안 간 협력 재개 가능성은 미흡

* 1992년 11월 중국과 대만이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의 명칭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것

○ 또한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억제하고 양안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국방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차이잉원 정부의 국방력 강화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으로 평가

- 차이잉원 정부는 국방 예산 인상(GDP의 2% → 2.5%), 군 복무기간 확대(4개월 → 1년), 예비비 제도 개혁, 잠수함·드론 등 자체 기술개발 등의 국방력 강화 정책 추진

□ [외교] 양안 교류가 재개될 가능성은 희박한 반면, 한국·미국·일본 등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적극적인 교류 및 파트너십 추진

○ 라이칭더는 대만 해협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안보적 요인과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미국 및 기타 민주주의 국가와 협력 추구

○ (한국) 한국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한 '친구'라 보고 한국과의 관계 강화 의지 표명

- 지난 1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총통에 당선되면 "관광 교류, 경제·무역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확대하고, 기후 변화에 공동 대응하겠다"며 공식적으로 한국과의 협력 의지 드러냄²⁾

○ (미국) 대만의 가장 중요한 국제 파트너를 미국으로 여기며 대만의 안보 보장을 위해 강력한 미국-대만 관계와 미국의 지원 촉구

- 지난 1월 15일 당선 직후 바이든 대통령이 파견한 미국 대표단을 만나 "미국이 대만을 계속 지원해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며,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 요청³⁾

1) 연합뉴스, 「대만 여당 대선후보 "당선돼도 독립선언 안해...이미 주권국가"」, <https://www.yna.co.kr/view/AKR20230517121400009/>

2) 조선일보, 「라이칭더 "당선 땐 대만-한국 관계 강화...新공급망 논의할 것"」,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china/2024/01/12/325Q6T6A3RGZPQDP52DB7VOI/>

3) 한국경제, 「라이칭더 당선되자마자...발빠른 '親美 행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37071>

○ (일본) 일본과의 좋은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일본과의 우호적 관계를 바탕으로 한 교류를 지속할 전망

- 라이칭더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만과 일본은 가족 같다”고 평하고, 야스 타로(前일본 총리)와의 만남에서 대만-일본 간의 경제 협력 강화를 표명하는 등 일본과의 협력 구축 의지를 지속적으로 드러냄⁴⁾

□ [경제·산업] 차이잉원 정부의 '6대 핵심 전략 산업' 과 '2050 넷제로(Net-zero) 전환' 계획을 계승하여 한 단계 발전시켜 추진

○ 차이잉원 정부는 '20년 5월 취임 연설을 통해 대만 경제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6대 핵심 전략 산업'을 발표하였으며, 라이칭더는 이에 더해 '5대 신뢰 산업' 육성 공약 제시

- 6대 핵심 전략 산업은 ① IoT·AI, ② 정보 보안, ③ 바이오·의료 기술, ④ 방위·항공우주, ⑤ 신재생에너지, ⑥ 민생 필수품(의료물자, 생활용품, 식량 등)으로 구성

- 5대 신뢰 산업은 ① 반도체, ② 인공지능(AI), ③ 군수(방위), ④ 보안, ⑤ 통신으로 구성

○ '22년 3월 '2050 넷제로(Net-zero)'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적 행동 경로를 제시하는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이 발표되었으며, 라이칭더는 이를 계승하여 추진해나갈 것을 밝힘

- 라이칭더는 차이잉원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계승한 '제2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바탕으로 원자력 축소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로 확대할 계획

4) The Japan News, 「Exclusive Interview with Taiwan Vice President William Lai, Candidate for President, on China, Defense」, <https://japannews.yomiuri.co.jp/world/asia-pacific/20231007-141486/>

<표 2> 라이칭더 당선자의 주요 정책 내용

구분	내용
양안 관계	- 대만 해협의 평화를 보전하기 위한 양안 관계의 현상 유지 -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 억제를 위한 국방력 강화
외교 정책	- 경제·안보적 요인으로 인한 민주주의 국가와의 교류 확대 - 한국·미국·일본 등 주요국과의 협력 의지 공식적 표명
경제·산업	- AI 등 '6대 핵심 전략 산업' 및 반도체 등 '5대 신뢰 산업' 육성 추진 - '2050 넷제로(Net-zero)' 달성을 위한 원자력 축소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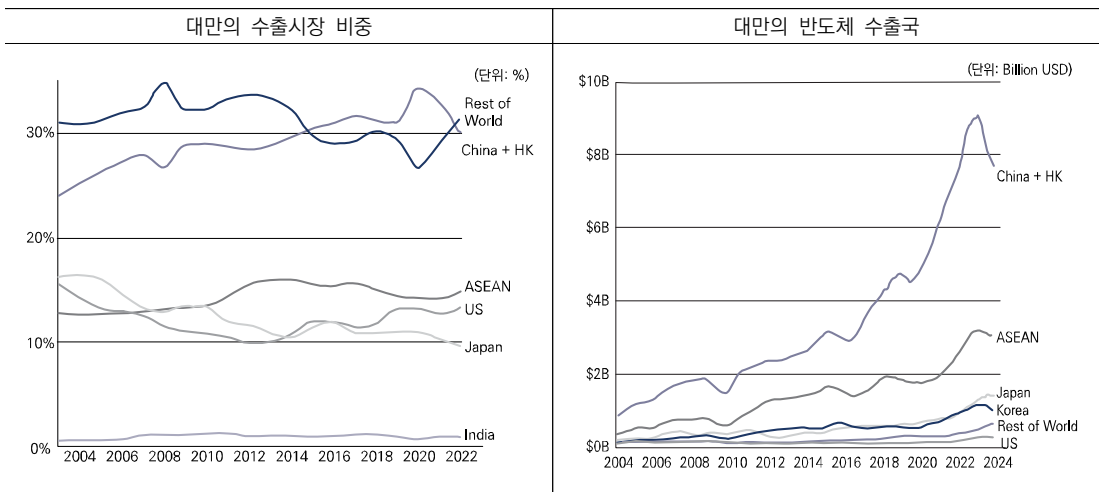
자료: 민진당 선거 캠페인 공식 홈페이지(<https://taiwan2024.tw>) 및 언론보도 종합

III. 중국의 대응과 양안 분쟁의 양상

- 민진당 정권재창출로 양안 간 긴장관계는 지속될 것이 분명한 가운데 중국의 대만에 대한 압박 및 도발의 수위도 차이잉원 집권 기간에 비해 낮아질 가능성은 없음
 - 오히려 중국 내부의 문제(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민심 이반 등)를 회피하기 위해 對대만 도발 수위를 높여 양안 긴장도를 증가시킬 수도 있음
- 중국과 대만의 충돌 수위는 발생 확률이 낮을수록 피해액은 큰 바, 크게 봐서 확률 낮은 순서로 전면적 군사충돌, 대만 해협에서 군사 활동 강화(대만 해협 봉쇄), 저강도 도발 중심의 회색지대전술로 분류할 수 있음

- 전면적 군사 충돌 (Low Likelyhood): 양안은 경제적으로 상호의존도가 높아 전면적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임
 - '10년 체결된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으로 대만은 주요 수출시장(약 30%)인 중국에 경제적으로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중국 또한 대만으로부터 수입되는 반도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 대만 TSMC가 '반도체 방패'(Silicon Shield)의 역할을 하면서 양안 간 전면적 군사적 충돌은 당분간 억지될 것으로 보임

〈그림 2〉 대만의 수출비중 및 반도체 수출



□ 대만 해협에서의 군사 활동 강화(Middle Likelyhood): 발생 가능성이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대만 해협에서 중국의 군사활동 강화로 대만해협이 봉쇄되는 경우이며, 이 경우 우리나라 등 주요 교역국에 큰 타격을 줄 것임

○ 중국은 대만 인근 해역에서의 작전 수행, 해상 포격 훈련 등을 통해 직접적인 군사적인 충들을 피하면서도 상선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한다면 대만뿐만 아니라 역내 주요 교역국에도 상당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끼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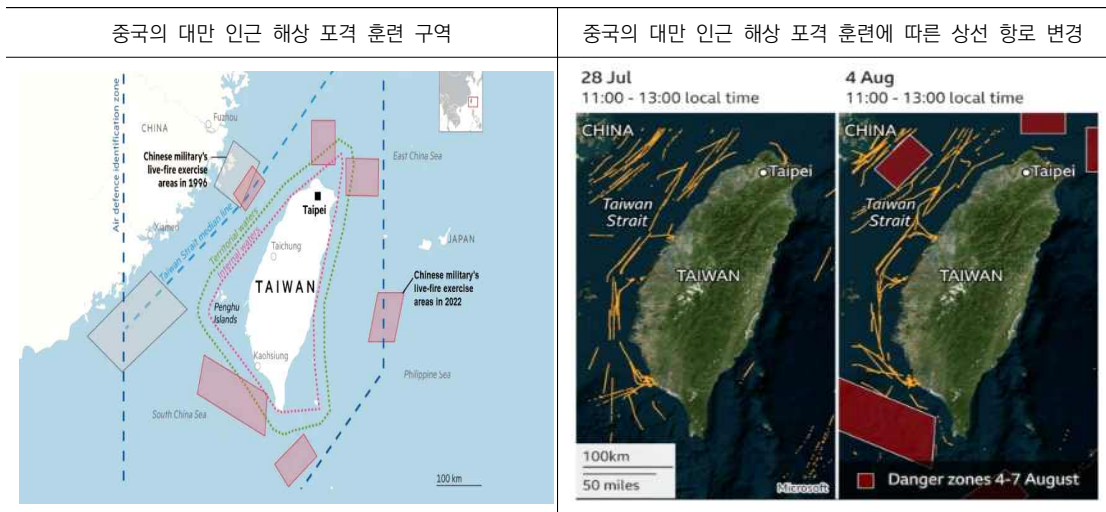
- 지난 '22년 8월 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에도 이미 중국은 대만 인근 6개 해역에 대한 선박 및 항공기 통행을 금지하고, 대규모 군사 훈련을 진행한 바 있음

□ 저강도 도발(High Likelyhood):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인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전개해왔던 '회색지대전술'(Gray Zone Tactics)을 지속·확대하는 것임

○ '회색지대전술'이란 전면적인 무력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 정도의 저강도 도발을 반복함으로써 군사안보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전략으로 간접적인 유사 군사 활동 전개, 경제적 제재, 사이버 심리전 등을 포함

- 특히, 중국은 지난 선거기간 동안 정찰용 풍선, 트위터 등 SNS를 통한 사이버 여론 조작 등 다양한 對대만 '회색지대전술'을 구사해왔음

〈그림 3〉 중국의 대만 인근 해상 군사활동



자료: Risk Intelligence('22.9)

- 특히, '회색지대전술'의 대표적 수단인 경제적 제재 (economic coercion)도 앞으로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음
 - 이미 중국은 대만산 과일(사과, 파인애플, 망고 등)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하였고, 최근에는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에 따라 12개 화학품목에 제공되었던 관세 감면 혜택 중단을 발표함
- 중국의 '회색지대전술'의 목표는 전시(wartime)와 평시(peacetime)의 구분을 없애고 끊임없이 상대방의 경제·군사·심리적 약점을 파고들어 '싸우

지 않고도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不戰而屈人之兵)으로, 대만은 이에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라이칭더는 과반수가 아닌 40%의 득표율로 당선된 만큼 대만 내부의 사회적 갈등, 경제적 문제(불평등, 물가, 부동산 등)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중국의 '회색지대전술'로 인해 정권의 지지기반이 서서히 무너질 수 있음

〈그림 4〉 중국의 '회색지대전술' 사례

선거기간('23.12 ~ '24.1) 대만 영공 중국 관측기구(풍선) 이동 경로



자료: 대만 국방부('24.1)

미국식 민주주의를 비판하는 SNS 웹툰



자료: China Youth Studio "No one size fits all" ('21.12)

IV. 양안 관계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 대선

□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라이칭더 당선자의 외교·안보 정책은 차이잉원 정부 기조와 큰 차이는 없을 전망

○ 따라서 대만 독립을 명시적으로 추구하지는 않으나 대만이 사실상 독립된 주권국가로 국제적으로 인식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취할 것이 예상됨

□ 중국도 오는 5월 새 정부 출범 전후로 경제보복 또는 양안의 긴장도를 높이는 군사 행동 등을 취할 가능성은 크지만 현 긴장 상황을 극도로 악화시키지는 않을 전망

○ 대만의 독립지향적 또는 독립된 주권국가로서의 외교적 행동에 대해서는 이전과 같이 제재 또는 군사적 위협을 통해 대응하되 실질적 피해를 초래하는 충돌은 피할 것으로 예상됨

○ 저장도 도발을 통해 일차적으로는 대만의 독립지향적 외교노선에 제동을 걸고 다음 선거에서 민진당의 집권연장을 저지하는 것을 우선적 목표로 삼을 것으로 예상됨

□ 양안 관계는 오는 11월 미 대선 결과에 따라 급격한 변화의 가능성도 존재

○ 현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을 이어간다면 현재의 차이잉원-바이든 체제 하의 양안 관계양상이 지속될 전망

- 미 바이든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2022년 9월 CBS)에서 중국의 대만 공격 시 미군을 투입하여 방어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음

○ 만약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면 미국의 대외정책은 현 바이든 정부와는 큰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미국의 대대만 정책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상존

- 예를 들어 트럼프는 현재의 NATO 체제에 대한 강한 불만을 여러 차례 피력한 바 있고 바이든 정부의 기조와 달리 親트럼프 인사들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반대를 시사하고 있으며 트럼프도 우크라이나의 영토회복 없는 종전(終戰)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음

□ 기본적으로는 공화당 민주당 양당 모두 중국과의 전략경쟁에서 대중국 압박기조를 취하고 있으며 트럼프 재집권 시에도 이 기조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임

○ 트럼프 집권 시기부터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되었고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한 트럼프의 대중국 견제정책은 바이든 정부에서도 계승되어 지속되고 있음

- 트럼프 집권 시기에 대만 고위 관리들이 미국을 방문하거나 반대의 경우도 허용하는 대만 여행법(TTA)을 통과시켰고 대만과의 무기 거래도 이전 오바마 재임 기간에 비해 연평균 2배 이상 증가하였음

○ 바이든 정부와 이전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정책에 있어 차이점은 바이든 정부는 미국의 우호국들(like-minded countries)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중국에 대한 압박을 보다 정교하고 체계화(예를 들어 IPEF)시켰다는 점

□ 하지만 재집권에 도전하고 있는 현재의 트럼프는 바이든 대통령과 달리 대만 위기 시 미국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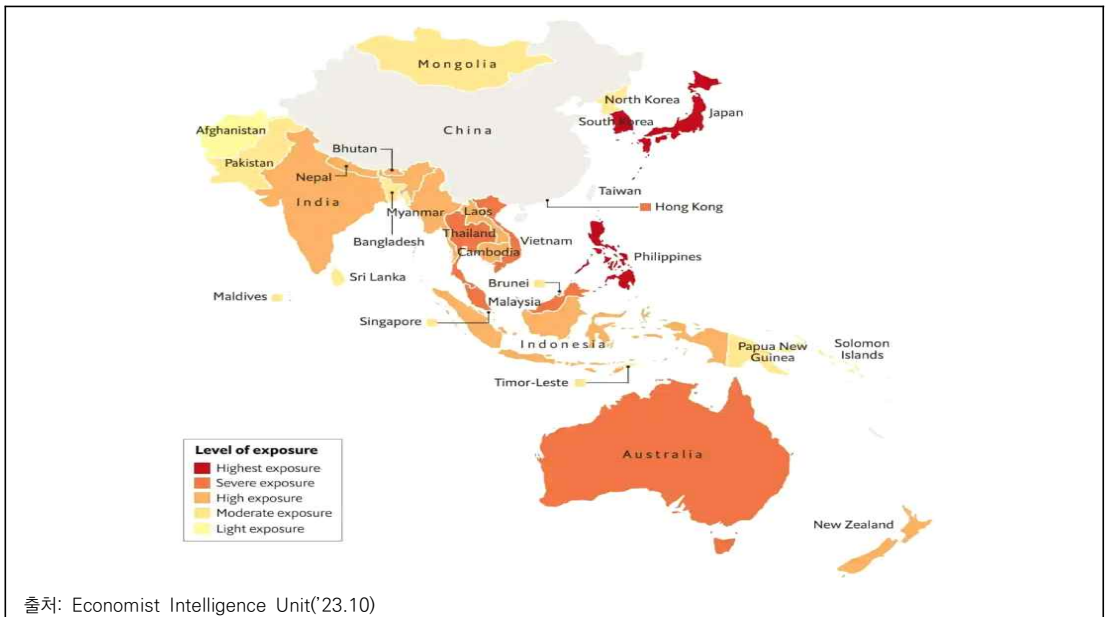
- 겉으로 드러난 트럼프의 對중국 강경 입장과는 달리 실제 중국이 대만에 대해 군사 행동을 단행할 경우 트럼프는 개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드물지 않은 상황⁵⁾
- 특히 트럼프 재임 시 국가안보보좌관을 역임하였던 존 볼튼(John Bolton)은 그의 회고록(The Room Where it Happened: A White House Memoir)에서 '대만은 트럼프가 버릴 수 있는 여러 카드 중 상위 5에 있다'고 주장하였음
 - 즉 트럼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대만을 활용하지만 중국의 대만 침공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대만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

□ 만약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 뒤 강한 '고립주의' 외교정책을 추진할 경우 양안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상당히 증가할 전망이다

- 그동안 트럼프가 보여 준 '경제적'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이 외교안보정책에도 그대로 투영될 경우 바이든 정부가 구축한 국제질서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초래
- 양안 분쟁의 위험에 대한 노출도가 큰 한국, 일본 등 동맹국에 양안 안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음

5) 워싱턴포스트 기자 조시 로진(Josh Rogin)의 책 "Chaos Under Heaven"에서는 여러 취재를 통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트럼프는 대만을 방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 (<https://www.vice.com/en/article/n7vpqb/trump-wasnt-going-to-do-a-fucking-thing-if-china-invaded-taiwan-a-new-book-says>)

〈그림 5〉 대만 분쟁에 따른 리스크 노출도



□ 게다가 미국의 전쟁 억지력(deterance)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강경한 고립주의 노선의 선택은 동시다발적 국제분쟁의 가능성을 높임

○ 최근 전쟁억지력의 실패 사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 등

□ 가령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지속, 중동에서 전쟁 확산 등 동시다발적 국지적 분쟁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공격 발생 시 미국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트럼프가 집권하고 있을 경우 미국이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 전쟁을 수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시되며 이 상황에서 미국이 '고립주의'를 표방한다면 대만은 미국의 우선적 보호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있음

□ 미국의 고립주의 선택과 함께 미국은 복수(複數)의 전쟁 수행 의사가 없다는 점을 중국이 인식할 경우 대만에 대한 군사공격 확률은 더욱 높아질 것임

○ 중국의 국력이 하강하기 시작(Peak China)함에 따라 대만 통일의 기회는 시간이 갈수록 희박해질 것이라는 점을 인식한 시진핑이 미국의 고립주의 정책을 기점으로 모험적 행동을 할 가능성도 배제 못함

○ 양안에서의 전면적 군사충돌은 가장 확률이 낮은 이벤트이지만 발생 시 그 피해는 가장 크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략적 대비가 필요함

IV.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민진당의 정권창출 이후 우리나라 입장에서 선호하는 최소한의 시나리오는 현재의 양안 관계가 악화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한국은 대만과 다양한 산업 협력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음**

○ 특히,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新공급망 구축 분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분야에서의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예를 들어 LS전선은 대만에서 약 1조 원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내 해저케이블 공사를 수주했으며, SK오션플랜트도 대만 해상풍력 시장에서 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하부구조물 공사를 수주함

□ **하지만 올해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최악의 경우 양안 간 군사적 충돌까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예상되는 한국의 피해 규모⁶⁾는 막대할 것으로 보임**

○ 높은 확률로 현 양안 긴장 국면의 지속이 예상되나 미국 대선결과에 따라 미국의 대외정책의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 양안 관계의 불확실성 급증 가능

○ 특히,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 노선을 내세워 양안 안정을 위한 (경제적·군사적) 비용 분담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이에 동참할 경우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적 제재(핵심 원자재 수출 제한 조치 등)가 예상됨

○ 또한 양안 간 무력 충돌로 인해 대만해협이 봉쇄된다면, 에너지·식량 등 핵심물자의 원활한 국내 조달에 차질이 발생

□ **따라서 현 양안의 긴장 상황이 유지될 것이라는 희망에 기대기보다는,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 양안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려면 여러 '만약(if)'의 조건이 성립되어야 하나, 낮은 확률임에도 피해액은 천문학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리스크 대비 시,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야 함

○ 우선 우리 정부는 중국, 대만, 일본, 미국 등 핵심 이해당사국들과 긴밀한 소통채널을 가동해 각국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해야 하며, 유사시 전략물자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대체 공급선 확보 등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마련에 나서야 함

○ 우리 기업들은 최악의 상황 시 해상물류 차질, 공급망 중단 등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즈니스 연속성 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을 수립·보완할 필요가 있음

6)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한국 GDP 23% 급감 예상

FKI 한국경제인협회

발행일 2024년 1월 25일 | 발행인 김병준 | 발행처 한국경제인협회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타워 46층